

#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

##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이광수의 사회 담론의 의미

김현주\*\*

1. 역사적 설명 범주로서의 ‘사회’
2. 『매일신보』의 치안사회 담론
3. 이광수, ‘(조선인) 사회’의 상태와 욕구를 재정의하다
4. 「대구에서」의 배치와 기대 독자/필자
5. 사회비평과 사회적 공공성
6. 1910년대 중반 조선에서 ‘사회’의 정치성

###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1910년대 중반에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의식과 감각이 등장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은 1916년 9월 22~3일에 연재된 이광수의 「대구에서」이다. 이 논문의 목표는 「대구에서」에서 이광수가

\* 이 논문은 2008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KRF-2008-812-A00345).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hjkimw@yonsei.ac.kr

‘사회’를 재현하고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중요한 테마들, 그것들을 전개하는 데 사용한 지식(어휘)과 표현양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1910년대 중반 이후 『매일신보』에서 공공성을 둘러싼 해석의 정치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는 것이다.

『대구에서』에서 이광수는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대구 청년들의 권총강도 사건을 분석하면서 기왕에 『매일신보』가 ‘(조선인) 사회’를 재현하고 판단하는 데 적용해온 두 가지 지배적 관점, 즉 치안의 관점과 도덕의 관점을 배제했다. 이광수가 선택한 새로운 해석전략은 사회화·심리화 전략이었다. 이광수는 사건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독자들로 하여금 청년들의 상태와 그들의 욕구에 주의를 돌리도록 했으며, 나아가 ‘(조선인) 사회’의 상태와 욕구에 주목하게 했다. 이광수는 ‘(조선인들의) 사회’가 공통으로 욕구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질서나 치안이 아니라 연대성, 능동성, 자율성임을 드러냈다.

『매일신보』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광수의 담론은 두 개의 지배적 논의 공간, 즉 식민권력(조선총독부와 『매일신보』의 편집주체)의 논의공간과 귀족·유교 지식인의 논의 공간에 대비해 제3의 논의 공간을 요구하고 형성했다. 그는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을 확립할 능력과 책임을 가진 집단으로서 근대를 이해하는 종교가와 교육가, 그리고 특히 문필가를 추천하고 이들의 담론공간을 요구했다. 또 그는 조선인 스스로 조선인들의 ‘사회’의 선악미추를 비판하는 문장, 곧 ‘사회비평’을 제안했으며 『대구에서』는 사회비평을 실천한 선구적인 텍스트이다. 『대구에서』의 수사적 목표는 ‘사회’를 주체화하고 공공성을 ‘사회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광수는 사회라는 말이 가진 정치적 능력, 즉 식민지민들의 동일화와 내부적 위계화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능력은 ‘민족’이나 ‘국가’가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바로 이점이야말로

계몽주의적인 엘리트들이 이 용어를 열성적으로 사용하고 유포한 이유일 것이다. 사회라는 말이 이후에 어떤 새로운 담론적 능력을 획득, 발휘해 나가는지를 성찰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이다.

**주제어** ● 사회, 사회적 공공성, 치안, 심리화 전략, 사회화 전략, 사회비평, 이광수, 『매일신보』, 「대구에서」

## 1. 역사적 설명 범주로서의 ‘사회’

『매일신보』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가 가동했던 담론 정치기관이었다. 『매일신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간단히 말해 조선총독부를 자신의 통치구역 내에서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최상위의 주체로 생산(구성)해내는 것이었다.<sup>1)</sup> 식민지 인민이 추구해야 할 공공적 가치에 대한 해석과 대표 권한을 누가 어느 정도 가지는가는 식민지의 정치적·문화적 헤게모니 구조에서 관건이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사법·행정기관을 비롯한 (준)국가기구들을 가동하여 공공성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자원들 또한 장악하고자

1) 근대적 공공성의 중요한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이라는 의미이며, 두 번째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공통적인(common) 것이라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open) 의미이다. 근대적 공공성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는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이음, 2009, 18~19쪽 참조. 본 논문에서 공공적 가치=공공성은 공통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라는 두 번째 의미에 초점을 두며, 이것과 다른 두 가지 의미 사이의 항쟁/결합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식민지에서 공공성을 둘러싼 담론 정치의 특징을 논의하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했다. 담론정치의 기구로서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를 조선인들이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이자 실행자로 이미 지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는 동시에 『매일신보』 자신의 공공적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와 그 부속기관인 『매일신보』가 조선에서 공공적 가치에 대한 최상위의 해석자이자 실행자로서 권위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법령과 정책 방침을 결정하고 내려 보내는 것만으로, 즉 국가권력의 실행만으로 그와 같은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과 새로운 문화적 조류를 표현하는 다양한 조선인 세력들도 자신들의 욕구와 더 나아가 조선인들의 욕구에 대해 나름의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공공적 가치의 규정에 개입하려 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와 조선인들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는 자들 사이에, 그리고 조선인 내부의 여러 집단들 사이에 공공연하거나 암묵적인 경쟁과 협상이 식민통치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매일신보』에서도 공공성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해석은 다양한 에이전트와 담론에 의해 중개·굴절되었으며, 따라서 ‘오독’과 ‘남용’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었다.

『매일신보』에서 공공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담론정치의 특징을 검토하기 위해 이 논문이 주목한 것은 사회라는 범주이다. 식민지시기 담론장에서는 인류/사회, 제국(국가)/사회, 민족/사회, 사회/계급 등의 관계에서 공/사의 경계선이 끊임없이 유동했다. ‘사회’는 제국에 대응한 식민지 인민의, 구 지식층에 대응한 신 지식층의, 엘리트에 대응한 민중의 요구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지만,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사용된 경우도 많았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석의 권한이나 ‘사회’를 재현(대표)할 자격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경쟁과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공공적 가치의 경계 규정과 바로 연결된 것이었다.<sup>2)</sup> 이런 점에서 ‘사회’는 공공성을 둘러싼 담론적 항쟁에 스며들어 있는 식민지 근대의 경

험과 모순을 설명하는 데 활용가능성이 큰 범주이다.<sup>3)</sup> 특히 식민통치 초기에 해당하는 1910년대의 ‘사회’는 주목을 요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사회라는 말이 의식화된 최초의 과정은 매우 유사했던 것 같다. 두 나라에서 ‘사회’는 19세기 말에서 1910년대를 거치면서 일반화되었는데, 1900년대까지 ‘사회’는 그 존재 영역이 불분명한 채 국가 속에 흡수되어 버리는 경향이 강했다. ‘국가’와 ‘사회’를 명료하게 구분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1910년 무렵까지 ‘사회’는 새로운 주체를 형성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두 나라 모두에서 국가주의적 지향이 강력했기 때문이다.<sup>4)</sup> 일본에서는 1910년대 중반 다이쇼 민주주의의 열망을 바탕으로 하여 ‘민중’이 의미론적으로 모호했던

- 2) 황병주는 식민지시기 ‘공’ 개념의 재구성과 확산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1) 조선총독부에 의해 추진된 근대적 관료제의 확산과 도로, 항만에서 학교에 이르는 다양한 공공영역의 창출, (2) 자본주의적 관계의 확대 재생산에 의한 ‘사회’의 형성을 꼽았으며, ‘공’을 둘러싸고 형성된 조선총독부와 ‘사회’ 사이의 갈등/교섭 관계에도 주목했다. 황병주, 『식민지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사회와 역사』73, 한국사회사학회, 2007 참조. 황병주의 연구는 식민지에서 사회 범주와 ‘공공성’의 관계에 대한 선구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지만 1910년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사회 개념을 전유함으로써 (1), (2) 사이의 경쟁/타협 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기로서 1910년대 중반에 주목한다.
- 3) 필자는 1910년대 초반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을 공공성을 둘러싼 식민권력의 담론정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사회’를 당대적 범주이자 역사적 설명 범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김현주, 『1910년대 초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과 공공성』,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참조. 이는 해리 하르투니언이 『역사의 요동』에서 ‘일상(성)’이라는 범주를 사용한 방식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다. 해리 하르투니언, 『역사의 요동』, 윤영실·서정은 옮김, 휴머니스트, 2006, 47~50쪽 참조.
- 4) 일본에서 사회 개념이 의식화된 과정에 대해서는 이시다 다케시(石田雄), 『일본의 사회과학』, 한영혜 옮김, 소화, 2003, 73~97쪽; 146~153쪽 참조. 한국에서 사회 개념은 ‘민족’보다 이른 1890년대 후반에 등장했지만 그것이 의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00년대 후반이었다. 국가주의 정치학 안에서 ‘사회’는 국가의 기반으로 이해되기도 했지만 국가와는 다른 범주로 이해되기도 했다. 한국에서 사회 개념의 수용에 대해서는 박명규,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체계』, 『사회와 역사』 59, 한국사회사학회, 2001; 박주원,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 『역사비평』 여름, 역사비평사, 2004 참조.

‘사회’를 대신하여 새로운 주체성으로 부상했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일본의 식민통치를 겪게 된 한국의 경우는 약간 달랐다. 1910년대를 거치면서 ‘사회’는 ‘조선’과 ‘조선인’의 자기 인식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식민지민으로서 조선인의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공동성을 조직하기 위해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양상을 『매일신보』에서 추적하고자 한다.

사실 합방 직후의 『매일신보』에서 ‘사회’의 존재성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했다. 1910년 9월 동안 사설을 비롯한 주요 기사들은 대개 일본(인)/조선(인), 제국/조선, 구(舊)한국정부/총독부 등을 대비함으로써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그 기조를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하게 보도한 것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새로운 ‘국가’가 이식되는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사회’는 바로 해체되어야 할 것이거나 관심 밖의 어떤 것이었다. 1900년대 후반에 불분명하게나마 형성되고 있었던 사회의 개념들, 곧 정치적 내용으로 충전된 사회(정치적 정당단체) 개념은 식민통치 하에서는 유지될 수 없었으며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으로서의 ‘사회’는 더욱더 『매일신보』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매일신보』가 점차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정황은 1912년 3월 1일에 시행된 지면개혁과 ‘사회면’의 도입에 나타난다. 『매일신보』는 수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1912년 3월 1일에 지면개혁을 단행했는데,<sup>5)</sup> 새로운 편집체제의 특징은 조선인들의 생활세계를 재현하는 지면의 비중을

5) 전신(前身)인 『대한매일신보』를 쫓아 국한문판/국문판이라는 이원체제를 유지해오던 『매일신보』는 1912년 3월 1일부터 국문판을 폐지하고 국한문판만을 발간했다. 아울러 활자를 개량하고 단수도 대폭 늘렸는데 이에 따라 전체 기사의 분량은 이전에 비해 약 두 배가 되었다. 지방통신원을 활성화했으며 유사(類似) 독자투고란이 마련되었고 연예란이 고정, 활성화되었다. 이즈음 단편소설 현상모집도 시작되었다. 1912년 3월 1일 지면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태영,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9, 123~126쪽 참조.

크게 높였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체 지면의 1/4에 해당하는 3면 전체를 조선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기사에 배당한 것은 신문에서 ‘사회면’이 편집된 최초의 사례였다.<sup>6)</sup> 사설류 기사에서도 ‘사회’는 ‘민족’이나 ‘전국(全局)’ 같은 용어들과 결합하거나 그 용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선인들의 공동세계를 상상하게 했다.<sup>7)</sup> 또한 이 무렵 『매일신보』는 신문을 “사회의 사진”으로 규정하고 신문의 의의를 “사회의 만반 상황을 듣고 보는 대로 기재하는” 데서 찾기도 했다.<sup>8)</sup> 1912년경부터 『매일신보』는 ‘(조선인들의) 사회’를 중요한 사회적 실재로 다루기 시작했다.<sup>9)</sup>

이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되는 지점이다. 1912년 이후 형성된, ‘사회’에 대한 재현과 평가의 문법은 19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뚜렷한 징후는 신문 편집 주체의 언어였던 ‘사회’를 조선인 외부 필자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데 나타난다. 다시 말해 총독부와 신문의 편집 주체에 의해 독점되었던 ‘(조선인들의) 사회’에 대한 재현과 평가의 권한이 외부의 조선인 필자들에게로 확장된 것이다. 사회·문화적 배경과 욕구가 서로 다른 다양한 필자들은 ‘사회’에 대한 기왕의 테마를 다양한 방향으로 굴절시켰으며 기왕에 사용해왔던 것과는 다른 지식과 표현양식을

6) 정진석에 따르면, ‘경과(硬派)기사=정치·경제기사=1, 2면=국한문’/‘연파(軟派)기사=사회기사=3면=순한글’이라는 지면 분할의 형태는 1912년 3월 1일 『매일신보』에서 처음 선보인 후 한국에서 신문제작의 전형이 되었다. 정진석, 『언론 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94쪽 참조.

7) 식민지 조선의 경제는 식민모국의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본 본국과 구분되는 ‘국민시장’적 특징을 나타냈다. 황병주, 앞의 글, 16쪽 참조. 예컨대 ‘민족사회’라는 표현은 ‘사회’를 민족적 공동체로 개념화하며 ‘조선전국(全局)’ 같은 용어는 ‘조선’을 하나의 독립적인 지역단위로 재현한다.

8) 『신문은 사회의 사진』, 『매일신보』, 1912.4.29. 본 논문에서 『매일신보』의 기사를 인용한 경우, 그 출처는 각주에서 기사 제목과 게재 일자만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인용문의 한자는 모두 한글로 바꾸었으며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음을 밝혀둔다.

9) 합방 직후와 1912년 3월의 『매일신보』에서 ‘사회’의 위치에 대한 검토는 김현주, 앞의 글, 241~249쪽 참조 바람.

동원하여 그것을 재현하고 평가했다. 1910년대 후반에는 ‘사회면’의 기사 내용과 정보 원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매일신보』에서 사회 담론의 위와 같은 전환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필자가 이광수이다. 1916년 가을부터 1918년 가을까지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매일신보』에 발표된 이광수의 모든 글은 ‘사회’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출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로 수렴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가설이다. 여기서는 우선 이광수가 맨 처음 『매일신보』에 연재한 기행서간문 형식의 산문인 『대구에서』를 사회 담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대구에서』에서 이광수가 ‘(조선인들의) 사회’를 재현하고 평가하기 위해 선택한 중요한 테마들, 그것들을 전개하는 데 사용한 지식(어휘)과 표현양식 등을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의 목표는 이광수의 사회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1910년대 중반 이후 『매일신보』에서 전개된 공공적 가치를 둘러싼 해석의 정치의 특징을 추출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는 것이다.<sup>10)</sup>

## 2. 『매일신보』의 치안사회 담론

이 절에서는 1916년 9월의 사설류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1910년대 초 중반에 걸쳐 『매일신보』에서 전개된 사회 담론의 일반적 성격을 개괄할 것이다. ‘(조선인들의) 사회’를 재현, 평가하고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사용된 주요 어휘들을 분석함으로써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의 기본 문

10) 필자는 1910년대 이광수의 문화 이념에서 사회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참조. 본 논문은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이광수의 이념 구조 내부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더 넓은 담론 맥락(『매일신보』)에서 검토한다. 즉 본 문은 특정한 개인의 사상이 아니라 식민지시기 초 담론정치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범주로서 ‘사회’에 주목한다.



법을 추출해보고자 한다.

1916년 9월 동안 『매일신보』의 사설은 해당 사안을 보통 제국(국가)-신민(국민)이라는 틀로 논의했지만,<sup>11)</sup> 사회/국가, 개인/사회, 개인/가족/사회라는 대상 범주들도 자주 활용했다.<sup>12)</sup> 콜레라의 예방과 처치가 긴급하고도 중요한 시기였던 터라 그 문제를 다루는 사설에서는 공중 같은 용어도 종종 사용했으며 일반시민(일반공중)/관현(당국) 같은 틀도 등장했다.<sup>13)</sup> 하지만 사설류 기사 전체를 개괄하면 개인/사회/국가라는 범주 체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사설류 기사에서는 ‘사회’의 상태를 ‘질서/무질서’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질서’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로 규정하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 또 ‘질서’의 실현을 도덕적 방면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에 동원할 언어를 유교의 담론에서 찾으려 했다.

공동생활의 건설하며 건설치 못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여부를 복(卜)하고 사회의 발전 여부로써 국가의 용체(隆替)를 징(徵)하기 족하니 공동생활의 건설은 즉 국가 흥륭(興隆)의 요소이오 공동생활의 건설을 도(圖)하려면 개개히 공덕심을 확충함에 재(在)하니 공덕심이라함은 사전(師傳)의 교훈을 대(待)하여 생(生)할 자도 아니요 관현의 계유(戒諭)를 의(依)하여 득(得)할 자도 아니요 다만 개개히 박애 자선을 위주하는 충심에서 유연자발(油然而發)하는 자이니 차 심(心)이 무(無)한 국민이야 어

11) 「석전대제(釋奠大祭)」, 1916.9.7; 「봉영송(奉迎送) 한원궁전하(閑院宮殿下)」, 1916.9.14; 「호역(虎疫)의 예방 박멸」, 1916.9.21.

12) 「검약론」, 1916.9.3; 「서적계의 폐풍(弊風)」, 1916.9.12; 「공동력의 필요로-고(告) 주조업자(酒造業者)」, 1916.9.13. 「호역과 오인의 각오」, 1916.9.25; 「종교의 의의」, 1916.9.25; 「종교의 의의(속)」, 1916.9.26; 「공덕심을 확충하라」, 1916.9.26. 이 글들에서는 사회의 발전/국가의 용체, 사회의 진보/국가의 문명 등 사회와 국가를 대응관계로 파악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한다.

13) 「호역과 위생」, 1916.9.1; 「호역과 위생(再)」, 1916.9.2; 「임시위생조합」, 1916.9.27.

찌 현대의 신국민됨을 득(得)하리오.

인(人)은 수초축수(隨草逐水)하는 금수와 이(異)하여 상부상의상조상에  
(相扶相倚相助相愛)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는 자이라 차를 건실히 유지하  
면 왈 시즉(是卽) 공덕심의 결정체라 하나니……[중략]……

스스로 건강에 주의하여 호역의 래습(來襲)을 방어하는 것은 다만 자  
개(自個)를 위함이 아니라 일가와 일리와 일향을 위함시오, 갱진(更進)하  
여 도로를 소제하고 불결물을 소각하여 기 누(累)가 타(他)에 급(及)치 아  
니케 함은 즉 공동생활의 건전을 도하는 대(大)공덕심에서 출(出)함인  
데……[하략]……<sup>14)</sup>

위 사설의 주장은, 건실한 공동생활이 ‘사회’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의  
발전의 바탕이 되는데 공동생활의 건실함을 좌우하는 것은 ‘공덕심’이라  
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공덕심은 법적 규제나 타인의 계도가 아니라  
개개인의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을 가능하게 하는 도덕성이다. 공덕심 앞에 ‘대(大)’라는 관형어를 붙인 이  
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덕의 실천사례로서 거  
론된, 도로 청소나 오염물 소각 등이 위생의 항목인 데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서 ‘사회’의 상태는 단연 청결/불결이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되고  
있다. ‘질서’와 더불어, ‘청결’은 『매일신보』가 “조선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 중요한 기준이었으며,<sup>15)</sup> 이것들은 대개 ‘공덕심’이  
라는 도덕적 자질의 문제로 환원되곤 했다.

‘공덕심’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매일신

14) 『공덕심을 확충하라』, 1916.9.26.

15) 김백영은 20세기 초 일본의 조선에 대한 인식은 19세기에 세계를 지배한 문명/  
미개, 질서/혼돈, 청결/불결, 근면/나태의 이분법적 맥락 속에서 배태되었다고 보  
았다. 김백영, 『청결의 제국, 오물의 고도: 경성의 위생 담론과 공간정치』, 『고도  
의 근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화연구소,  
2009.1.9, 185쪽 참조.

보』의 해석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휘이다. 석전제(釋奠祭)를 기념하여 실은 사설에 따르면, ‘유교’=‘공맹의 도’의 핵심인 “군신, 부자, 부부의 3대강”은 예로부터 도덕의 건전성, 풍화의 보편성, 치안의 안전성의 토대가 되어 왔다.<sup>16)</sup> 유교의 3대 강령이 왕정의 기초를 안전하게 보존할 뿐 아니라 사회의 풍습과 도덕,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데 이념적 자원이 되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즉 『매일신보』는 유교를 공동생활의 규범적 가치, 즉 공공성의 도덕적 자원(공덕심)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유교의 가르침이 민간의 풍교와 습속 차원에서 실천도덕의 형태로 정착된 것들을 발굴하고자 했다.

그런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를 ‘질서’로 규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힘을 개인의 ‘도덕심’에서 찾으려는 태도는 『매일신보』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계속 견지해온 것이었다. ‘사회면’을 처음 선보인 1912년 3월 동안을 살펴보면 『매일신보』가 조선인들의 공동세계인 ‘사회’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질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민·형사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기사를 수집, 보도한 3면, 즉 ‘사회면’은 ‘(조선인들의) 사회’를 문란하고 난잡한 모습으로 재현함으로써 ‘질서’를 ‘사회’, 즉 조선인들의 공동세계가 목표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들었다. 사설류의 기사에서도 ‘사회’는 질서/무질서의 관점에서 재현되고 논평되었으며, 무질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6) 『석전대제』, 1916.9.7. 석전제는 조선왕조 국가 제사의 하나로서 공자의 사당인 문묘에 지내는 제사였다. 조선총독부는 성균관을 폐지한 자리에 다시 설립한 경학원(1911년 8월 설립) 주도 하에 석전제를 매년 봄, 가을에 지속적으로 거행했다. 조선총독부의 촉탁으로 오랜 기간 조선의 민속을 조사한 무라야마 지준(村上智順)은 조선시대의 석전제가 왕조와 개개인의 양 차원에 순환적으로 작용하면서 사회통합의 기제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국가제사의 하나로 중시되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백광렬, 『‘망한 나라의 국가제사’: 식민지기 경학원 석전제를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연구 속의 ‘식민지 조선’』(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5.22~23, 39~44쪽 참조.

이러한 재현과 평가, 논의에 동원된 중요한 자원이 바로 유학 담론이었다. 1912년 3월 동안을 보면, 『매일신보』가 ‘(조선인들의) 사회’의 “문란”(무질서)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공공적 가치에 대한 도덕적, 규범적 해석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조선인들이 서로에게 요구해야 할 ‘윤리’, ‘도덕’, ‘예의’ 등은 대개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규범적 관점에서 그 효능이 검토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공심’이었다. 유교는 공공심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었으며 같은 관점에서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다시 말해 『매일신보』는 한편에서는 유교가 사적 도덕만을 제공해왔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동세계의 질서를 유지할 이념적 자원을 여전히 유교에서 찾으려 했다. 위에서 인용한 사설에 제시된 ‘상부, 상의, 상조, 상애’나 ‘공덕심’ 같은 용어는 『매일신보』가 공공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 해석에 도덕적 담론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동안 『매일신보』에서 ‘질서’를 비롯한 “일반사회의 이익” 혹은 “공익”을 정의하고 실현하며 보호하는 행위자로 재현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법·행정기관들이었다. ‘(조선인들의) 사회’에서 ‘질서’는 법률과 그 에이전트인 사법부와 헌병-경찰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법령, 예컨대 ‘경찰범치벌규칙’이야말로 ‘사회’의 질서/무질서의 경계를 규정할 수 있으며 사법부와 경찰은 그 규정에 의거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실행자라는 뜻이다. 특히 3면, 곧 ‘사회면’은 사회 담론과 치안(公安) 담론을 결합시켜 ‘치안사회’의 이상을 표현했는데, 주목할 점은 이 면의 주요기사들이 경찰서 혹은 헌병과견대, 지방 관청, 재판소 등을 정보원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면의 기사는 경찰과 헌병의 취조서, 심문서, 검시보고서, 판사의 판결문, 군수·면장의 행정 문서 등을 ‘받아 적은’ 것이었다. 이는 ‘사회의 상태’가 이들 공문서의 양식을 통해 지각되고 전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즉 공문서의 양식이 이미 ①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② 포함/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③ 무엇에 대한 판단이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었

다.<sup>17)</sup> 이러한 지각-전달 양식의 효과는 독자들 또한 치안의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보게 만드는 데 있다. 곧 경찰 등의 조서를 받아 적은 기사들을 읽는 독자는 경찰서, 헌병파견대, 지방 관청, 재판소 등 공권력의 눈으로 하위문화에 속한 사람들, 즉 사기범, 방화범, 강도, 강간범, 무녀, 기생, 매음녀, 도적, 살인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문란한 세계를 목격하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법자들을 응징하거나 법 집행의 체계를 효율화할 것을 요구하게 되기 쉽다. ‘사회면’의 수사적 목표는 조선인 독자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치안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sup>18)</sup>

1916년 9월의 『매일신보』에도 전염병을 비롯하여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들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행위자는 공권력임이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원활한 관-민 협력’이 권장되고는 있었지만, 법령과 그 에이전트인 사법부와 경찰이야말로 질서/문란의 기준과 경계를 결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질서를 구현하는 주체임이 분명했다. 예컨대 『임시위생조합』이라는 사설에서는 지역민의 위생에 ‘일반 시민의 협동력’과 ‘관민의 일치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었지만, 실상 ‘임시위생조합’은 ‘종로경찰서장의 유시(諭示)’와 ‘관헌의 지도 감독’에 의해 결성, 운영될 것으로서 종로경찰서 관내에 조직되었다.<sup>19)</sup> 아울러 면제의 실행 등을 통해 행정 권력이 지방의 말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힘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단위의 지역 행정기관 역시 규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었다.<sup>20)</sup>

17) 3면에는 사건사고 기사의 기본 플롯을 넘어서 사건의 원인이나 주변상황에 대한 감상이나 논평을 첨가한 기사들도 종종 있었다. 사회면의 일반 내용을 ‘초과’하는 이러한 잉여들의 작용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필요하다.

18) 1912년 3월분을 표본자료로 하여 1910년대 초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의 특징을 논의한 부분은 김현주, 앞의 글, 252~262쪽 참조.

19) 『임시위생조합』, 1916.9.27.

20) 1912년 3월의 사회면에도 군수, 면장 등 지방행정기관장들이 해당 지역민의 공통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자로, 혹은 해당 지역민과 경찰서나 헌병대를 매개하는 중개자로 나타난 적이 있다. 하지만 사건사고를 취급하는 사회면의 성격상, 이

사설류 기사에서 사회면에 이르기까지 1916년 9월 동안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치안의 시각이었다. 조선총독부와 그 부속기관인 『매일신보』가 ‘(조선인들의) 사회’에 대해 내리는 해석과 판단은 치안 담론 안에서 그 내용과 한계가 규정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물론 사설류 기사 가운데 일부는 ‘사회’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했다. ‘극단적인 검약과 절약은 오히려 사회의 활동을 마비시킨다.’거나,<sup>21)</sup> ‘서적계가 사회의 문명을 지도한다.’<sup>22)</sup>는 주장에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필요)를 ‘질서’나 ‘치안’이 아니라 ‘활력’이나 ‘문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은 사설류 기사 전체에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회면’의 편집에 큰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다.<sup>23)</sup> ‘사회’에 대한 새로운 담론은 다른 곳에서 활성화되고 있었다.

---

들의 일상적 행정업무가 체계적, 전체적으로 재현되지는 않았다. 면제의 실시  
에 따른 식민지 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에 대해서는 윤해동, 『지배와 자치: 식  
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제2부 참조.

21) 『검약론』, 1916.9.3.

22) 『서적계의 폐풍』, 1916.9.12.

23) 1910년대 『매일신보』에서 사회면 편집체제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즈음한 시기의 3면은 1916년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때에는 경찰이나 사법부를 정보원으로 한 범죄 사건과 사고에 대한 보도가 2/3 이상 줄었다. 특히 폭행, 절도, 강도, 사기, 노름, 풍속 사범 등에 대한 보도는 급감했다. 그 대신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행사나 인물, 건축과 시구개정사업 등 관영사업에 대해 기자의 취재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쓴 기사가 많이 게재되고 있다. 또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된 소비자 물가정보, 건강, 교통비, 기후, 공휴일, 학교 등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다. 한편 궁전의 복궁공사나 ‘이왕전하’의 행보 관련 보도가 ‘사회면’에 배치된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1918년의 ‘사회면’은 ‘사회’의 경계와 욕구 등에 대한 『매일신보』의 해석이 계속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권보드래는 1910년대 『매일신보』의 정치, 문화적 키워드를 추출, 정리하면서 위와 같은 성격에도 주목한 바 있다.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 출판부, 2008 참조.

### 3. 이광수, ‘(조선인) 사회’의 상태와 욕구를 재정의하다

1916년 9월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1면 중앙에 춘원생(春園生)이라는 필명으로 연재된 『대구에서』에는 민족이나 동포뿐만 아니라 국민, 신민, 인민 같은 용어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청년들에게 일을 주면 안분낙업(安分樂業)하는 양민(良民)이 될뿐더러 사회의 산업을 발전하는 훈공자(勳功者)가 될지라.’라는 주장에서 ‘양민’이 한 번 등장한다. ‘안분낙업하는 양민’은 『매일신보』 사설의 상투어지만, 문장의 짜임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을 주었을 때 그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광수는 ‘양민’보다 ‘사회’의 훈공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사설 3~4개 정도 분량의 글인데, 여기에 사회라는 용어가 자그마치 25번이나 등장한다. 일반사회, 신사회, 전반사회라는 파생명사와 ‘사회적’이라는 관형어를 비롯하여, 이 글에는 ‘사회’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포함하고 또 생산하는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다. 사회의 중추, 사회의 개량지도, 사회의 각성, 사회의 주권, 사회의 종류이상 인물, 사회의 존경과 칭찬, 사회의 결함, 사회의 대자본, 사회의 죄인, 사회의 손실, 사회의 타락, 사회의 질서, 사회의 규모, 사회의 감화, 사회의 제재, 사회가 스스로 다스리다, 사회의 일류인사, 사회의 청년, 사회의 냉대, 사회의 선악미추, 사회의 훈공자, 사회의 산업 등. 사회라는 단어를 이처럼 여러 번 반복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또 ‘사회’를 이처럼 다양한 단어들과 결합시킨 기본 논리는 무엇이였을까?

『대구에서』의 화제는 1916년 9월 4일 대구에서 발생한 청년들의 권총강도 사건이다. 『매일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9월 4일 새벽 2시경에 대구에서 서유순이라는 자산가의 집에 숨어들었던 2명의 도둑이 들켜서 도망을 가다가 쫓는 머슴에게 육혈포를 쏘아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9월 6일에 처음 보도되었으며 8일, 10일, 22일에 ‘권총강도’라는 표제로 범인들과 그들을 숨겨준 자들이 추적, 체포되는 과정이

차례로 보도되었다. 사건에 연루된 자들 중에 ‘상당한 신분을 가진 자’, ‘대구 협성학교의 교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해당 교원이 ‘특히 성질이 좋지 못하여 당국이 주목을 해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외의 사실을 밝혀낼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신속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진행했던 것 같다. 9월 10일에는 수사 과정에서 권총 6자루와 탄약 수십 발이 발각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공범자와 방조자를 포함하여 관련자가 모두 체포된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것은 9월 22일이었다.<sup>24)</sup>

같은 날 1면에 실린 글이 바로『대구에서』이다. 이광수에 따르면, 이 사건의 특이성은 범인들이 “상당한 교육을 받던 중류 이상 인(人)들”이고 “다 소간 생활할 만한 재산도 있는 자들”이며 일찍이 “대구친목회(大邱親睦會)를 조직하여 대구 청년의 향상 진보를 도모한다던 자들”이라는 데 있었다.

사회의 중추(中樞)가 되어야 할 그네가 이러한 대규모의 대죄를 범하게 되니 이를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범범(泛泛) 간과치 못할 것은 물론이라. 반드시 그네로 하여금 이에 이르게 한 동기(動機)가 있을 것이로소이다. 그네는 이미 범죄자라 범률이 응당 상당히 처벌(處罰)하려니와 사회의 개량 지도에 뜻을 둔 종교가 교육가 조교가(操觚家)는 이 범죄의 심리적 우(又) 사회적 원인을 구핵(究覈)하여 후래의 청년을 정도(正道)로 인도하여 써 여사(如斯)한 전율(戰慄)할 범죄를 미연(未然)에 방알(防遏)할 의기가 있어야 할 것이로소이다. 모르레라 조선인 중에 여사한 사건을 여사한 의미로 주의하고 관찰하고 사구(思究)하는 자가 기인(幾人)이나 되는가.<sup>25)</sup>

24) 『강도 追者を 射함』, 1916.9.6; 『권총강도 공판』 권총강도는 元教員, 1916.9.8; 『권총강도 피수 경성에서 逮捕』, 1916.9.10; 『대구권총강도 전부 就縛』, 1916.9.22.

25) 춘원생(春園生), 『대구에서 (1)』, 1916.9.22.



위 인용문은 이광수가 사건에 대한 해석 코드를 제안하는 부분인데, 그 제안은 곧 앞 절에서 살핀 ‘사회’에 대한 『매일신보』의 두 가지 지배적 해석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하나는 법의 해석, 즉 직접적인 치안의 관점인데, 3면에 자주 재현된 것처럼, 사법부와 경찰서·헌병대가 강도와 같은 강력범을 처리한 방식을 떠올리면 된다. 치안의 시각은 ‘사회’의 상태를 질서/무질서의 이분법에 의거해 판단하며 사람들의 욕구를 폭력, 절도, 사기로부터의 보호나 계약의 이행 등에 대한 보장으로 해석한다. 공권력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안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권총강도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보통사람들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의 기준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또 치안의 관점에서의 예방대책은 법과 경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일 터이다. 그런데 이광수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강도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에 규모가 엄정하여 인인(人人)이 그 사회의 선량한 감화를 받으며 사회의 제재를 두려워하기를 법률의 제재보다 더하게 되면 결코 청년들이 이처럼 단체적으로 주색(酒色)의 쾌(快)를 취하지 아니하게 될지라. 조선도 석일(昔日)에는 매동매향(每洞每鄉)에 엄연한 불문율이 있어 사회가 스스로 다스려가더니 근래에 이것이 다 깨어지고 새것이 아직 확립치 못하여 인인이 헌병이나 순사에게 포박만 아니 당할 일이면 기휘(忌諱) 없이 행하게 되니 이에 적이 재산이 있는 이는 주색과 사치와 태타에 빠지기를 자랑하게 된 것이라.<sup>26)</sup>

26) 춘원생, 『대구에서 (2)』, 1916.9.23.

이광수는, ‘사회’는 법률로는 향상시킬 수 없으며 “사회가 스스로 다스려” 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광수도 사회를 “질서”와 “규모(規模)”, 즉 규칙과 법식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 유지는 국가의 그것과는 다른 기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법률”에 의해 다스려진다면 사회는 “불문율”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이광수는 국가의 공권력보다 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규칙을 강조한다.

다른 하나는 도덕적 관점, 즉 사회 안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규칙에 대한 도덕적 해석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강도, 절도, 매매춘 등의 행위에 대한 총독부와 『매일신보』의 지배적 해석 코드는 그것을 도덕적 타락의 결과로 보는 것이었다. 도덕성의 결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와 『매일신보』는 유학의 진흥 및 유교적 도덕규범의 확산을 꾀했다.<sup>27)</sup> 물론 이광수가 사용한 “사회적 타락”이라는 표현에는 도덕적 관점의 혐의가 있다. 또 그는 총독부가 강조한 대로 위험사상과 죄악의 근원으로서 청년들의 나태와 무위를 경계했다. 그러나 이광수는 나태의 책임을 청년 개인의 부도덕에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다만 청년의 죄구(罪咎)라 할 수 없을지오 청년을 수용(需用)치 아니하여 청년으로 하여금 유태(遊惰)하게 하는 일반사회의 결함(缺陷)이라 할 수 있을지라.”<sup>28)</sup>

이광수는 범죄의 “진인(眞因)”을 세 가지, 즉 1. 명예심의 불만족, 2. 할 일이 없음, 3. 교육의 미비와 사회의 타락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아래는 범죄의 원인분석을 요약한 부분이다.

일언이폐지하면 여사(如斯)한 죄악은 조선 청년계에 가장 일어나기 쉬운 죄악이요 또 그 책임은 사회의 결함에 있으니 곧 그 원인은 명예심의

27) 유학자인 장지연은 『매일신보』에 글을 쓰기 시작한 첫 날에 ‘부호들과 그 자제들의 사치, 그리고 직업이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창기, 도박에 탐닉하여 쪼들리다가 도적이 되는 현실’을 도덕의 관점에서 해석, 비판했다. 장지연, 『고재만필』, 1914.12.23~24.

28) 춘원생, 『대구에서 (2)』, 1916.9.23.

불만족, 즉 자기의 포부 능력을 펼 기회가 없음과 심신을 분망하도록 바칠 만한 사업이 없음과 교육이 미비하고 사회가 타락하여 청년이 상당한 지식을 얻을 기회 없으며 선량한 감화와 선량한 표적을 얻지 못함에서 출래한다 하리니……[하략]……29)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에 접근하는 이광수의 첫 번째 전략은 심리화이다. 심리화 전략의 의의는 그것이 청년집단의 욕구(필요, needs)를 다르게 해석하고 정의하도록 해주었다는 데 있다. 욕구는 그것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며, 욕구 해석의 정치는, 그것의 충족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다툰다. 강도사건에 대한 심리적 분석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치안이나 도덕의 관점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이광수에 따르면, 조선의 청년들에게는 명예심을 충족할 기회, 일할 기회, 상호교화와 지도의 기회가 결여되어 있다. 이는 조선의 청년들에게는 행할 수 있는 것, 될 수 있는 것의 범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여기서 청년들의 욕구는 단순히 재화나 쾌락의 필요가 아니라 ‘존재’와 ‘행위’에 대한 필요로 재정의 된다. 이광수는 청년들의 상황을 기본적인 잠재능력의 박탈로 해석함으로써 그것의 충족을 청년들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30)</sup>

범죄의 원인과 해결책에 접근하는 이광수의 두 번째 전략은 사회화이다. 욕구 해석에 개입하는 담론의 정치권리는 권리 요구에 대해 누가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청년들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욕구와 권리는 국가가 법과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에서 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나 친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인가? 맨 앞의 것이 그 필요를 국가의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욕구로 해

29) 춘원생, 『대구에서 (2)』, 1916.9.23.

30) 욕구 해석의 담론 정치에 대해서는 사이토 준이치, 앞의 책, 79~88쪽 참조.

석하는 전략이라면, 뒤의 두 개는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담론이 취하는 전략이다. 이광수는 청년들에게 포부와 능력을 펼 기회를 주고 일을 주고 지식과 감화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청년들의 나태와 타락, 범죄는 청년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청년들을 그러한 처지에 둔 사회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청년들이 아니라 사회라는 것이다. 이광수는 청년들의 범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 즉 사회에서 비롯하고 사회가 대처해야 할 문제로 재해석했다.

이광수가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회적”, “심리적”이라는 용어이다. 이광수는 기왕에 『매일신보』가 강도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처해온 두 가지 방식, 곧 도덕의 관점과 치안의 관점을 배제했다. 즉 문제에 대한 논의를 도덕의 결여/함양이라는 해석틀, 치안의 부재/강화라는 해석틀로부터 해방시켰다. 이광수는 범죄의 “동기”와 “원인”에 관심이 있으며 그것들을 법과 도덕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방향에서 접근하여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사회화·심리화 전략이야말로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 해석의 코드를 교체한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코드를 교체함으로써 이광수는 그전에 문제제시되지 않았던 것을 문제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이광수는 강도사건의 원인과 해결책을 청년집단의 계층, 지위, 역할, 환경 등 사회관계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청년집단이 경험하는 심리와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에 따라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청년들은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청년들이 욕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다. 사회화·심리화 전략은 독자들로 하여금 조선 청년들의 상태와 그들의 욕구에 주의를 돌리게 한다. 당시 조선의 청년들이 이광수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의 새로운 해석 코드의 더 중요한 의미는 ‘(조선인) 사회’의 상태와 욕구에 주목하게 했다는 데 있다. 이광수는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청년들의 일탈행동의 진정한 원인이 ‘(조선인) 사회’의 자기통치 능력의 결여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선인들의) 사회’는 조선 청년들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회’의 욕구나 그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공동의 가치에 대해 ‘청결’이나 ‘질서’ 같은 규범적 차원이 아닌,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구에서』라는 글은, ‘사회’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연대적이고 능동적인 행위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구성원들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통치(自律)의 기술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사항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절의 맨 앞에서 『대구에서』에 사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바 있는데, 사회라는 단어의 사용을 일관한 논리는 ‘사회’를 연대적, 능동적, 자율적 행위능력의 담지자, 즉 ‘주어’로 위치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대구에서」의 배치와 기대 독자/필자

지금까지 ‘사회’를 연대적, 능동적, 자율적 주체로 생산(구성)하는 이광수의 담론 전략에 대해 논의해왔는데, 담론의 정치에서는 담론의 전략뿐만 아니라 담론의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둘러싼 담론의 정치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동원할 수 있는 지식들, 그 해석을 생산·소통시키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표현 양식과 공간, 즉 다양한 사회·문화적 자원을 둘러싸고도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매일신보』에서 「대구에서」라는 글의 위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찍이 김윤식은 『대구에서』를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편지 형식의 기행문’이라고 보고 편지 형식의 효과와 어조에 주목했다. 그는 편지형식을 감동적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광수의 특출한 능력으로 평가하면서 『어린 벗에게』의 편지형식이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감응력을 예로 들었다. 또 그는 “『대구에서』는 식민지 치하 한국 청년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총독부에 건의하고 제시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편지형식 중에서도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하나이다’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광수가 “이 글을 쓴 의도는 식민통치자들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이 글이 통치자의 구미에 꼭 알맞은 것이었다.”고도 했다.<sup>31)</sup> 김윤식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식민권력’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대구에서』의 편지 형식은 소설에 채용된 편지형식과는 다른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어린 벗에게』와 『대구에서』의 편지 형식은 모두 친밀성을 환기하지만 전자는 감동을, 후자는 동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어린 벗에게』의 편지형식이 화자의 감정의 진정성에 대한 감동이나 감응을 높이는 효과를 거둔다면, 『대구에서』의 편지는 설득하는 언어를 가지고 타자에 마주서는 대화의 형식으로 채택된 것이다.

둘째는 편지의 수신인 문제이다. 『대구에서』의 수신인을 식민권력으로 단정하는 것은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아울러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글을 쓰게 된 일과 그 글의 성격을 조선총독부와 『매일신보』의 전략이나 의도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도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매일신보』가 조선인들을 독자로 상정한 신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를 식민통치자로만 한정할 수 없다.

물론 편지 안에서 직접 호명된 수신인은 그날 아침에 헤어진 “선생”=

3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한길사, 1986, 507~511쪽 참조. 김윤식은 이 글을 총독부에 대한 “헌책”이라고도 표현했다(510쪽).

“족하(足下)”이다. ‘족하’는 일반적으로 ‘친구를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되는데, 이 편지에서 이광수는 자신을 “소생(小生)”으로 낮추고 자신의 견해가 “천단(淺短)”하다고 겸양의 어법을 구사하면서 “형안(炯眼)”과 “심모(深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의 논의 능력에 존중의 태도를 표시한다. ‘~하나이다’라는 어미 역시 같은 효과를 낸다. ‘족하’는 자신의 의견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합의에 이를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신자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문면에 드러낸 직접적 수신자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은 잠재적 수신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글의 위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1916년 9월 동안 『매일신보』의 제1면에 실린 텍스트는 발화자의 정체성, 표기문자와 양식에 따라 크게 네 부류로 나뉜다. (가) 논설과 기사(특파원 포함), 총독부 관료의 글로서 국한문체로 쓰였다. (나) 우당(于堂)과 송양산인(嵩陽山人) 등 조선인 유학자들의 칼럼, 강연록 등으로 대체로 전통적인 한문문체를 준용했다. (다) 의료, 기술, 종교, 문화 분야 등에 종사하는 일본인/조선인 외부필자들이 쓴 글로서 국한문 문장이다. (라) 『선림일석화(禪林一夕話)』, 『아자(我子)의 미덕-아들 기르는 묘법』 등 흥미와 정보를 함께 추구하는 연재물로 순국문 혹은 8~90%의 국문체를 유지했다. 표기 문자와 양식 및 내용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1916년 9월의 제1면은 신문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32)</sup>

제1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발화는 말할 것도 없이 (가)였으며, 특히 조선총독부와 『매일신보』의 입장을 대표하는 ‘논설’이었다. 사실 『매일신보』는 초기에는 ‘관보’의 형태에 매우 가까웠다. 즉 『총독부공문』이나 법

32) 제5단의 『문원(文苑)』란에는 『동시총화(東詩叢話)』가 거의 빠짐없이 실렸다. 이외에 『가장(家章)의 연구』가 연재되었고 『외사편언(外事片言)』란이 있었으며 맨 아래에는 광고가 있었다. 『매일신보』의 편집에 대해서는 더 섬세한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신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면 편집의 변화만 살펴봐도 이 신문의 성격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체의식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만을 우선 살펴보았다.

령, 그리고 총독의 ‘훈령’, ‘유고’ 등을 그대로 게재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관료들의 해설을 실는 경우가 많았다. 총독부의 공문이나 법령을 직접 인용하는 지면을 축소시키면서 신문 편집주체의 보도와 해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는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법과 행정지시를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한 ‘논설’은 여전히 신문의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한 지면을 점유했다.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것은 (나), 곧 조선인 유학자들의 글이었다. 1912년 3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선인 외부필자의 비중이 높아졌지만 그 중에도 유학자의 권위는 특히 인상적이다. 9월은 마침 석전제가 열린 달이었기 때문에 며칠에 걸쳐 『석전대제』라는 사설을 비롯하여 행사 관련 기사와 사진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그러나 『매일신보』에서 유학자들의 권위는 비단 ‘석전제’에서 비롯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예컨대 송양산인 장지연<sup>33)</sup>은 이미 1914년부터 고정 필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장지연은 1914년 12월 『고재만필(古齋漫筆)』로 시작해서 『만필소어(漫筆瑣語)』, 『송재만필(松齋漫筆)』, 『만록(漫錄)』, 『만필한화(漫筆閑話)』 등을 연재했는데, 같은 표제 아래 200여회에 걸쳐 글을 쓴 경우도 있었다.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글쓰기 양식을 가리키는 ‘만록’, ‘만필’, ‘한화’ 같은 제목들을 달고 있지만 주제는 유교를 비롯한 전통 학문과 종교, 역사나 풍속에 관련된 것에서 시사와 국제정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sup>34)</sup> 좀 더 꼼꼼히 검토해야겠지만, 1915년 이후 『매일신

33) 장지연(1864~1920년):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호(號)는 위암(韋庵), 송양산인이다. 1894년(고종 31년)에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하여 관리의 길을 시작했으나 1897년에 이승만(李承晩), 남궁억(南宮棼), 양흥묵(梁興默) 등과 함께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에 참여하면서 관직을 떠났으며 1899년 『시사총보(時事叢報)』의 편집인이자 주필로 언론 활동을 시작하여 『황성신문』, 『경남일보』를 거쳤다. 1914년 12월 23일부터 1918년 7월 11일까지 『매일신보』에 글을 썼다.

34) 장지연은 1915년에 연재한 『만필소어』에서는 조선공진회, 해인사 대장경의 박물관 공개, 신무천황제일, 의학시험 실시와 의학의 진흥, 사찰령 등 총독부의 정책을 소재로 글을 썼다. 아울러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전망을 일본의 침략이



보』에서 장지연을 비롯한 유학자들은 조선인 필자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고 권위 있는 필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1916년 9월의 『매일신보』에서 유학과 유학자들의 발화는 상당한 비중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었다. 석전제 당일에는 경학원 부제학인 자작(子爵) 이용식(李容植)의 『인유불위야후가이유위(人有不爲也而後可以有爲)』와 강사 여규형(呂圭亨)의 ‘강설(講說)’이 ‘사설’을 대신했다. 우당 윤희구(尹喜求)<sup>35)</sup>의 칼럼은 1면 사설 바로 아래에 거의 한 달 내내 연재되었으며 역시 사설을 대신하기도 했다.<sup>36)</sup> 또 사설 아래 왼쪽에는 2~4단에 걸쳐 송양산인 장지연의 『송재만필』이 3회 연재되었고 이어서 『만록』이 12회 연재되었다.<sup>37)</sup> 우당, 송양산인 등의 글은 한학 교육을 받은 자들 사이에

데올로기인 아시아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글도 썼다. 1916년 중반에 연재한 『시사소언』에서는 동양의 영구한 평화와 현재의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범아세아문로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소위 일본맹주론에 부합하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도형,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경인문화사, 2000, 97~109쪽 참조.

35) 윤희구(1867~1926년): 본관은 해평(海平)이며 호는 우당(于堂)이다. 한학을 공부했으며 1897년 조정에 사례소(史禮所)가 신설되자 장지연(張志淵)과 함께 직원이 되어 『대한예전(大韓禮典)』을 편찬했다. 그뒤 참상(參上)으로 『문헌비고』를 증수, 규장각에 보직되어 『양조보감(兩朝寶鑑)』을 편찬했다.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촉탁으로 경학원부제학을 겸했다. 1916년 장지연·오세창(吳世昌) 등과 『대동시선(大東詩選)』을 편찬했다. 문집에 『우당시문선(于堂詩文選)』이 있다.

36) 1916년 9월 동안 1면에 실린 윤희구의 글로는 「人傑地靈」, 1916.9.2: 「新秋消息」, 1916.9.10: 「時雨恒雨」, 1916.9.13: 「中秋望月」, 1916.9.14: 「月詩續言」, 1916.9.16: 「古物論」, 1916.19: 「古物續論」, 1916.9.22: 「秋季觀感」, 1916.9.28: 「內恒外恒」, 1916.9.30이 있다. 이 가운데 세 편은 사설을 대신해 실렸다. 사설을 대체한 다른 글로는 자작 조중응(趙重應), 「東洋人一致相補之必要」, 1~2, 1916.9.19~20이 있다.

37) 嵩陽山人, 『송재만필』, 1916.9.1~5; 『만록』, 1916.9.9~25. ‘만필’이나 ‘만록’은 고정란의 표제였고 그날그날의 주제는 작은 제목으로 따로 표시되었다. 『송재만필』에는 ‘일사유사(逸士遺事)’, ‘일사유사설(逸士遺事說)’이 실렸고 『만록』에는 ‘지리관계’ 1~5, ‘독서’, ‘일사유언가석(逸士遺言可惜)’ 1~3, ‘호열자예방주의’ 1~3이 실렸다. 『매일신보』에 연재된 장지연의 글은 ‘만필’이나 ‘만록’ 같은 한문학의 문제(양식)가 신문이라는 근대적 인쇄매체에서 어떤 주제적, 형식적 변화

서만 제대로 소통되는 다양한 언어자원들을 활용했다. 1916년 9월 시점에서 보면, 『매일신보』에서 유학지식인들은 해박한 한학 지식 및 전통적인 한문학의 문체와 클리셰에 의해 구별되는 배타적인 발화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한편 제1면의 중앙 2~3단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외부필자들이 참여한 지면(다)가 있다. 이 지면에 등장한 일본인 외부필자는 4인으로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기사와 기수, 역사학자, 임제종(臨濟宗)의 포교감독이다. 필자의 신원(직업과 직위)이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련된 의견이나 지식을 내놓고 있다.<sup>38)</sup> 조선인 필자는 모두 6인으로, 지창한, 한준석, 춘원(생) 이광수, 김성기, 이응섭, 노인규였다.<sup>39)</sup> 자생의원 의생임을 명기한 김성기 이외에는 필자의 신원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필명을 쓰거나 실명과 함께 호를 병기한 경우가 많았다. 조선인 필자들의 직업과 경력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2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까지 의료인, 승려,<sup>40)</sup> 지방의 하위관료 혹은 교육자,<sup>41)</sup> 서화가,<sup>42)</sup> 일본 유학생 출신<sup>43)</sup> 등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조

를 겪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텐데, 여기서 이 점을 깊이 살피지는 못했다.

38) 1916년 9월 동안 1면에 실린 일본인 외부필자의 글로는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 기사 森勇三郎, 『조선의 도기공업』 1~3, 1916.9.5~7; 총독부 중앙시험소 기수 室田武隣, 『조선의 기직업(機織業)』 1~3, 1916.9.8~10; 三浦周行 박사, 『완전한 조선사』, 1916.9.17; 임제종 조선 포교감독 後藤瑞巖, 『종교의 요의(要義)』 1~2, 1916.9.25~26.

39) 1916년 9월 동안 1면에서 조선인 외부필자의 글로는 백송(白松) 池昌翰, 『서화담(書畵談)』, 1916.9.15; 韓準錫, 『對永興( )機業組合하여 勸告 半島實業家』, 1916.9.19; 춘원생, 『대구에서』 1~2, 1916.9.22~3; 자생의원(慈生醫院) 의생 金性琪, 『호역치료에 就(취)하여』, 1916.9.26; 용주산인(龍珠山人) 李應涉, 『人世의 과정』, 1916.9.26; 춘원 이광수, 『동경잡신(東京雜信)』 1~2, 1916.9. 27~8; 춘포(春圃) 盧麟圭, 『만주유역관(滿州遊歷觀)』 1~2, 1916.9.29~30이 있다.

40) 이응섭은 용주사 승려로만 알려져 있다. 용주산인이라는 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승려 신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1) 한준석: 1877년 함경남도 출생. 총독부 군서기를 거쳐 함흥군 서퇴조면장과 사립 서퇴조학교의 교장을 지냄. 총독부의 표창을 여러 차례 받음.

선인 필자들이 『매일신보』에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글은 근대적 의학지식에 바탕을 둔 전문적 조언에서부터 철학적 단상, 여행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조선인 외부필진의 구성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정책 방향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매일신보』는 1910년대 초부터 조선인들을 지도하고 대표할 집단으로 ‘조선귀족’과 중앙 및 지방의 유림을 지목하고 이들이 조선인들 사이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담론적 지원을 했지만,<sup>44)</sup> 〈조선물산공진회〉의 개최를 즈음한 1915년경에는 신홍하는 ‘중간계층’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어떤 나라 어떤 시기든지 특정 사회는 중류 이상의 계급이 주도하는 것’으로서 현재 ‘일선인의 중류 이상 계급(유력자, 사상가, 실업가 등)이 진정으로 융화하면 그 이하의 사회는 저절로 쫓아간다.’<sup>45)</sup> 이 가운데서도 특히 광업, 운수업, 금융업, 의약업 등을 대표하는 소위 ‘실업가’ 그룹과 신문기자 등의 지식인 그룹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sup>46)</sup> 1916년 9월 동안 『매일신보』가 의생 같은 기술 지식인에게 지면을 나누어준 것은 이러한 취지였을 텐데, 일본인 외부 필진에 비해 조선인 외부 필진의 정체성과 기대 독자 등은 아직 복합적이고 모호했다.

- 
- 42) 지창한: 1851년 함경북도 무산(茂山) 출생. 호는 백송(白松)이며 서화가이다.  
 43) 이광수와 노인규는 동경 유학생(출신)이다. 노인규는 1891년생으로 호는 춘포(春圃)이다. 관립 평양일어학교를 졸업하고 공립 평양동인의원(同仁醫院)부속 평양의학교 기초를 졸업했다. 와세다대학 상과 전과(全科)를 수료하고 돌아와 춘포약방을 신설, 경영했다.  
 44) 『매일신보』가 초창기에 ‘조선민족의 대표’, ‘인민의 모범’이라고 불렀던 집단은 새로 창출한 ‘조선귀족’이었다. 심재욱, 『1910년대 조선귀족의 실태: 『매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두리미디어, 2005, 199~201쪽 참조. 1910년대 초 『매일신보』에서 유학 담론의 활용에 대해서는 김현주, 앞의 글, 253~257쪽 참조.  
 45) 『여하히 하면 일선인이 융화될가』, 1915.6.19~26.  
 46) 박성진,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선인, 2003, 88쪽 참조. 김성진은 총독부문서자료를 통해 〈조선물산공진회〉 개최시기의 각종 모임들이 이들 ‘중류계층’을 대상으로 조직되고 있었음을 정리해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이광수의 『대구에서』는 두 개의 지배적 논의 공간, 즉 식민권력(조선총독부와 『매일신보』의 편집 주체)의 논의 공간 및 귀족·유교지식인의 논의 공간과 구분되는 제3의 논의공간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광수는 사설류 기사처럼 토픽만을 직설적으로 표현(예: ‘임시위생조합’)하거나 ‘…론’이나 ‘…하라’는 식의 권위적인 제목을 붙이지 않았고, 유학자들처럼 ‘만필’이나 ‘만록’ 같은 고풍스러운 문체명을 쓰지도 않았다. 즉 그는 권위적인 논설문이나 전통적인 한문문체보다는 친밀한 토론과 대화를 내재한 국한문체의 서간문 형식을 활용했다. 아울러 ‘대구’라는 지명을 넣어 기행문의 성격을 드러냈지만, 9월 동안 실린 여러 편의 기행문에 제목으로 사용된 ‘…탐승기’, ‘방(訪)…’, ‘…유역(遊歷)’ 같은 관례적 표현과는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성격을 고려하면, ‘대구에서 보내는 편지’ 정도가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할 것이다. 『대구에서』는, 제목에서 글쓰기 양식에 이르기까지, 관료적 권위나 전통적 위신에 기댈 수 없으며 새로운 문체와 화법을 공유한 필자군/독자군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sup>47)</sup>

## 5. 사회비평과 사회적 공공성

지금까지 『대구에서』의 위치와 양식적 특징을 ‘사회’의 주체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관점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대구에서』의

47) 1916년 9월 동안 1면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재된 글은 『禪林一夕話』이고, 『我子의 美德-아들 기르는 묘법』은 8~14회까지 연재되었다. 『선림일석화』는 기사에 의해 편집된 글로 보이며 때에 따라 다르지만 8~90% 정도가 국문이다. 로돌 사람이라는 필명으로 연재된 『아자의 미덕』은 순국문이다. 이 두 편의 글은 1면의 3, 4단에 배치되었는데, 사진이나 사고(社告)에 밀려 양쪽 가장자리로 밀려거나 나뉘기도 했지만 중앙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 기사들에는 표제와 함께 특징적인 삽화가 있다. 사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국한문체를 사용한 『대구에서』는 이 두 글과는 대상 독자와 목표가 다르다.

‘내적 형식’이다. 『대구에서』야말로 이광수가 ‘사회’를 주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주장한 담론형식, 곧 조선인 스스로 조선인들의 “사회의 선악미추를 비판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이광수가 제안하고 실행한 사회비평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겠다.

『대구에서』를 ‘사회를 비판하는 문장’, 곧 ‘사회비평’의 모델이라고 보았을 때, 여기서 사회비평이란 정치비평, 경제비평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국가와 시장 이외에 일반인들의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예컨대 교육, 종교, 가정, 유행, 취미, 예술, 관습, 도덕 등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글쓰기를 말한다. 조선인들의 공동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국가의 치안이나 개인의 도덕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며 ‘사회’의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이 바로 사회비평이다.

이광수가 제안한 사회비평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대구에서』가 ‘(조선인들의) 사회’ 내부의 권위체계에 대한 『매일신보』의 담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미끄러뜨린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광수는 (조선인들의) 사회를 주도할 새로운 계층, 집단에 대해 총독부와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그 구체방책은 학교교육과 사교기관(社交機關)과 강연(講演)과 신문잡지와 종교와 독서 등으로 청년으로 하여금 현대를 이해케 하여 활동할 무대와 명예의 표적(標的)을 현대에 구(求)케 하는 동시에 직업교육을 힘써 각각 불한식(不汗食)의 수치(羞恥)를 깨닫게 하고 겸(兼)하여 신사업을 넓히어 청년들의 활동할 문호(門戶)를 개방하며 일면으로 청년의 사교기관을 장려하여 선량한 상호감화(相互感化)를 얻게 하고 타면(他面)으로는 문장과 언론으로 사회의 선악미추(善惡美醜)를 비판하여 써 청년으로 하여금 추향(趨向)할 바를 알게 함에 있다 하나이다.<sup>48)</sup>

위 인용문은 ‘청년문제’의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다. 교육 기관, 사교기관, 연설, 신문잡지, 종교 등은 청년들이 ‘현대’를 이해하고 거기서 자신들의 포부를 펼 수 있도록 도와줄 제도적 장치로서 주목된 것이다. 이어서 이광수는 청년들의 상호감화를 가능하게 할 사교기관과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문장과 언론’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대구에서』의 서두에서 이광수는 대구사건을 비롯하여 조선인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의”, “관찰”하고 “사구(思究)”할 능력과 책임을 가진 집단으로 종교가와 교육가, 그리고 특히 문필가를 지목한 바 있는데, 학교, 강연, 신문, 잡지, 종교 등은 바로 이들이 활동하고 발화할 수 있는 기관과 제도였다.

사회의 일류인사(一流人士)라는 변호사 실업가 등은 그 언행의 조야의 설(粗野猥褻)함으로 사회의 청년을 독해(毒害)하고 교육가 종교가 같은 선량한 인격자(人格者)는 사회의 냉대(冷待)를 받아 청년의 숭앙(崇仰)하는 목표가 되지 못하게 하니 ……[하략]……49)

이광수는 소위 ‘사회의 일류인사’라고 하는 변호사, 실업가가 오히려 청년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년을 이끌 자격을 가진 집단으로 교육가와 종교가를 들고 있다. 『동경잡신』에서도 이광수는 ‘관계(官界)’ 즉 “총리대신”과 “관검사”나 “군수”에 비해 “종교, 교육, 학자계”를 열등하게 취급하는 유학생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했다.<sup>50)</sup> 이러한 메시지는 ‘(조선인들의) 사회’ 내부의 권위체계에 대한 『매일신보』의 담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미끄러뜨린다. 즉 『대구에서』를 통해 이광수가 ‘사회’에 대한 치안적·도덕적 해석을 사회적·심리적 해석으로 대체했다면, ‘사

48) 춘원생, 『대구에서 (2)』, 1916.9.23(강조는 원저자).

49) 춘원생, 『대구에서 (2)』, 1916.9.23.

50) 춘원 이광수, 『동경잡신 (2)』, 1916.9.28.

회’에 대해 이러한 새로운 해석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집단으로 부상한 것은 관료나 법조인, 실업가가 아니라 종교가와 교육가, 그리고 특히 문필가였던 것이다.

이광수가 ‘사회를 비판하는’ 문장과 언론을 중요시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자기통치 능력을 보여주는 글쓰기이자 그것을 육성하는 글쓰기라는 데 있었다.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사회비평은 ‘사회’라는 주체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스스로를 개선해나가는 장소이자 제도로서 기능한다. ‘사회’라는 주체의 자율성이 표현되는 제도, 즉 ‘사회’가 자체 내에 가지는 반성의 기제로서 사회비평은 ‘사회’를 자기통치(자율)의 주체로 세우는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비평이 청년들의 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 이유는 ‘사회’의 자기통치 능력의 결여야말로 청년들의 타락을 야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영민은 1910년대 중반 이광수의 등장을 ‘계몽주의의 부활’로 이해하면서 『대구에서』가 계몽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낸 중요한 글이라고 평가했는데,<sup>51)</sup> 이때 계몽의 핵심은 바로 ‘사회’의 자기통치 능력의 회복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근대적 지식인·작가들이 창안한 담론 장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논설’이었다. 계몽기에 담론 생산의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는 저널리즘이었고, 이른바 민족지들이 이를 선도했다. 계몽주의적 지식인들은 이들 신문을 현실비판이나 새로운 사상전파의 장으로 활용했으며, 그 핵심에 논설란이 있었다.<sup>52)</sup> 『독립신문』에 처음 등장한 ‘논설’의 형식 창조적 이데올로기는, 의사소통의 하부구조의 변화에 의해 조성되고 저자/독자의 관계 변화를 통해 구현된 새로운 공공성과 관련이 있다. ‘논설’의 관례와 문법은 근대적 공공성의 이데올로기와 감

51)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163~173쪽 참조.

52) 계몽기 논설 장르의 모델에 대해서는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사』, 솔, 1997;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참조.

각을 생산하고 유통시켰다.<sup>53)</sup>

초기의 ‘논설’은 식민지화에 따른 구조적, 역사적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을 거치게 된다. 식민지화 초기에 해당하는 1910년대 내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간된 유일한 중앙 일간지였던 『매일신보』에서 궁극의 발화주체는 조선총독부였다. 따라서 그 신문의 관례와 문법은 일차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법령과 행정의 체계에 의해 규정되었다. 특히 논설은 조선총독부가 발화한 법과 행정의 지시를 식민지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했다. 『매일신보』의 논설이 생산하고 유통시킨 이데올로기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정의된 공공성, 다시 말해 식민지 의제국가의 공공성이었다면, 『대구에서』에는 ‘국가적’, ‘법적’ 공공성에서 ‘사회적’ 공공성으로의 중점 이동이 나타난다. 사회비평의 형식 창조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공공성인데, 이는 ‘공공적인 것’을 정의할 권한을 ‘사회’가 가진다는 의미이다. ‘국가’와 ‘논설’을 빼앗긴 식민지의 지식인이 그 대체물로 ‘사회’와 ‘비판(비평)’을 제안한 것이다.

이광수는 ‘사회비평’을 통해 조선인들의 사회 안에서 조선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자율적 공론장의 이상을 표현했다. 사회비평의 이념이 가장 명료하게 표명되고 실천된 『신생활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들은 사회의 문제, 즉 종교, 교육, 가족, 도덕의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개인의 의견들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판단되어야 하는데, 타당성의 판단 기준은 이성(합리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고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규범이 도출되며, 이렇게 형

53) 미하일 바흐친에 따르면, 장르는 ‘형식 창조적 이데올로기’로 설명되어야 한다. 즉 장르는 세계에 대해 사유하는 특정한 방식이자 세계를 특정하게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바흐친의 입론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장르를 하나의 특정한 이데올로기 양식으로 본다. 게리 술 모슨·캐릴 에머슨, 『바흐친의 산문학』,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옮김, 책세상, 2006 참조. 계몽기의 ‘논설’을 근대적 공공성의 이념과 연결하는 논의는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참조.



성된 규범을 통해 ‘사회’는 스스로를 다스린다.<sup>54)</sup> ‘(조선인들의) 사회’가 실재했으며 그 존재를 이광수가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기보다, 또 그럼으로써 ‘사회’가 비로소 스스로를 비평할 권한을 주장했다기보다 사회비평이라는 상징적 실천을 통해 식민지 인민들의 존재양식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로서 ‘사회’가 구성 또는 생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6. 1910년대 중반 조선에서 ‘사회’의 정치성

지금까지 이광수의 『대구에서』를 분석함으로써 1910년대 중반에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 ‘국가’와 ‘국가적 공공성’에 대비되는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의식과 감각이 등장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대구에서』에서 이광수는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대구 청년들의 권총강도 사건을 분석하면서 기왕에 『매일신보』가 ‘(조선인) 사회’를 재현하고 판단하는 데 적용해온 두 가지 지배적 관점, 즉 도덕의 관점과 치안의 관점을 배제했다. 이광수가 선택한 새로운 해석전략은 사회화·심리화 전략이었다. 즉 이광수는 사건의 ‘심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 전략을 통해 이광수는 독자들로 하여금 청년들의 상태와 그들의 욕구에 주의를 돌리도록 했으며, 나아가 ‘(조선인) 사회’의 상태와 욕구에 주목하게 했다. 이광수는 ‘(조선인들의) 사회’가 공통으로 욕구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질서나 치안이 아니라 연대성, 능동성, 자율성임을 드러냈다. 『대구에서』의 수사적 목표는 ‘사회’를 주체화하고 ‘사회’의 관점에서 공적인 것을 정의하는 일이었다.

『매일신보』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광수의 담

54) 『신생활론』에 나타난 (사회)비평의 이념에 대해서는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166~168쪽 참조.

론은 두 개의 지배적 논의 공간, 즉 식민권력(조선총독부와 『매일신보』의 편집 주체)의 논의 공간과 귀족·유교지식인의 논의 공간에 대응해 제3의 논의 공간을 요구하고 형성했다. 그는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을 확립할 능력과 책임을 가진 집단으로서 종교가와 교육가, 그리고 특히 문필가를 추천했다. 또 그는 ‘현대’에 대한 이해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신진세력의 담론공간을 요구했다. 특히 조선인 스스로 조선인들의 ‘사회의 선악미추를 비판’하는 문장, 곧 ‘사회비평’을 제안하고 실천했으며, 이러한 상징적 실천을 통해 ‘(조선인들의) 사회’를 구성 또는 생산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의 분석과 논지를 확대한다면, 1910년대 중후반의 2년여 동안 『매일신보』에 실린 이광수의 모든 글의 내적 형식을 사회비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외적으로는 기행문, 서간문, 소설 등의 형식을 취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사회적’ 공공성의 감각과 이데올로기를 환기하고 확산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광수의 기행문, 서간문, 소설 들은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익을 공유하고 공통의 가치 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동질적인 공동체, 곧 ‘(조선인들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상상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회’는 조선인들의 공동가치가 만들어지고 저장되는 장소이며 공적 발화의 숨겨진 주체이자 행위자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인들의) 사회’는 계몽주의적인 엘리트지식인의 의식과 열망 속에서 파악된 특징이며 이에 의해 사회 담론의 내용과 성격은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렸다. 예컨대 이광수가 대구사건을 해석한 방식에는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사건 연루자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권총과 실탄의 수로 보건대 대구사건은 일반적인 강도사건이 아니었다. 수사를 경성에까지 확대하여 연루자를 일망타진하고 또 관련자의 1/2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 10년 이상의 징역을 판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경찰과 사법부는 이 사건을 위중한 사건으로 다루었음이 틀림없다.<sup>55)</sup> 사건을

55) 대구사건의 관련자들은 이듬해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시작되어 4월 26일에 판결을 받았다. 『매일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는 11명인

단순화한 것은 오히려 이광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대구에서』에는 조선의 청년들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고 주색의 쾌락을 탐하다가 급기야 위험사상과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그 안에 대구의 청년들을 포함시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선 청년들의 상태와 욕구에 대한 해석과 대처의 권한을 사법부나 경찰에게서 빼앗아 ‘(조선인들의) 사회’에 되돌려준다는 이광수의 전략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청년의 수동성과 타락이라는 식민권력의 지배담론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광수가 『매일신보』라는 담론장에 참여하기 위해 내놓은 ‘판돈’이었던 측면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계몽주의적 사회담론 내부의 위계장치가 발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sup>56)</sup>

『대구에서』에서 이광수가 요구한 것은, 간단히 요약하면, ‘사회적’이라는 말을 운용할 능력과 자격이 있는 자들의 논의 공간이었다. 먼저, 조선총독부를 정점으로 한 식민권력은 사회라는 말의 역능을 일정 정도 이상 활성화하기 어렵다. 사회라는 말을 지나치게 활성화하게 되면 이는 곧 국가(제국)적 공공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이라는 말은 현상에 즉자적이고 신체에 밀접한,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인 의사표현과는 거리를 둔다. 따라서 이 말은 문제가 된 사안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과 관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암시한다. 또 사회적이라는 말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종합하면, ‘조선인들의 사회’를 자신의 행위와 발화의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위치란 총독부의

데 김진우는 징역 12년, 김진만 등 5인은 징역 10년, 그 외에는 2년에서 4개월의 징역이 연도되었다. 『권총강도 공판』, 1917.4.24; 『대구 권총강도 판결연도』, 1917.4.28.

56) 소영현에 따르면, 1910년 전후의 일본 유학생 출신 청년들은 대구의 청년, 즉 조선의 청년을 피교육자의 자리에 놓고 자신들이 조선 청년의 교육의 주체이자 선배가 되는 방식으로 조선 청년과의 연계 고리를 만들어냈다.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159~170쪽 참조.

관료나 경찰이 아니라 일반 조선인, 하위문화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지식과 이해력을 소유한 자, 그중에도 실업가, 법률가나 기술계 지식인이 아니라 ‘정신’과 ‘심리’의 전문가들, 즉 종교가, 교육가, 문필가였던 것이다. 1910년대 중반 이후 이광수를 필두로 한 계몽주의적 지식인들이 ‘사회’를 열심히 유포, 확산한 데는, 그 말이 ‘민족’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화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과 아울러 위와 같은 위계화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라는 용어가 중요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때가 1910년대 중반 경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 ‘사회’가 어떤 궤적을 그려왔는지가 관심사가 된다. ‘사회’의 담론적 위치와 능력은 ‘민족’이나 ‘국가’ 등 다른 정체성 개념들과, 그리고 ‘문화’나 ‘문학’, ‘계급’, ‘대중’, ‘경제’ 등 중요한 근대적 담론(개념)들과 복잡한 관계구조를 형성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상대적이면서도 유동적인 ‘사회’의 위치는 공공적 가치의 정의를 둘러싼 경쟁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를 식민지시기 근대성의 경험과 모순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범주로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1. 자료

『매일신보』

### 2. 저서

권보드래,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동국대 출판부, 2008.

박성진,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선인, 2003.

김영민, 『한국 근대소설사』, 숲, 1997.

\_\_\_\_\_,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한길사, 1986.

김현주, 『이광수와 문화의 기획』, 태학사, 2005.

소영현, 『문학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8.

윤해동, 『지배와 자치: 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이시다 다케시, 『일본의 사회과학』, 한영혜 옮김, 소화, 2003.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바흐친의 산문학』, 오문석·차승기·이진형 옮김,  
책세상, 2006.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윤대석·류수연·윤미란 옮김, 이음, 2009.

해리 하르투니언, 『역사의 요동』, 윤영실·서정은 옮김, 휴머니스트, 2006.

### 3. 논문

권보드래, 『1910년대 새로운 주체와 문화』, 『민족문학사연구』 36, 민족문학사학회, 2008.

김도형, 『장지연의 변법론과 그 변화』, 『한국사연구』 109, 경인문화사, 2000.

김동식, 『한국의 근대적 문학개념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백영, 『‘청결’의 제국, 오물의 고도: 경성의 위생 담론과 공간정치』, 『고도의 근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화연구소, 2009.1.9.

김현주, 『1910년대 초 『매일신보』의 사회 담론과 공공성』,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박명규,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체계』, 『사회와 역사』 59, 한국사회사학회, 2001.

박주원,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 『역사비평』 여름, 역사비평사, 2004.

백광렬, 『‘망한 나라의 국가제사’: 식민지기 경학원 석전제를 중심으로』, 『탈식민주의 연구 속의 ‘식민지 조선’』(학술대회 논문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5.22~23.

심재욱, 『1910년대 조선귀족의 실태: 『매일신보』 기사를 중심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 두리미디어, 2005.

장석흥, 『일제의 식민지 언론정책과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성격』,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제6집』, 1992.

정진석, 『毎日申(新)報研究』, 『한국언론사연구』, 일조각, 1983.

함태영, 『1910년대 『매일신보』 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9.

황민호, 『총론』, 수요역사연구회 편,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1910년대』, 신서원, 2003.

황병주, 『식민지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사회와 역사』73, 한국사회사학회, 2007.

■ Abstract

## The Stance of Society and Social Publicity in the Colony

- The Meaning of the Social Discussion of Kwangsoo Lee in  
*Daily News (Mae-Il Sin-Bo)* in the 1910s.

Kim, Hyun-Ju

This thesis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society and social publicity, which are the contrasting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 publicity, were suggested in the *Daily News* of the mid-1910s, which was the bulleti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object of analysis in the thesis is Kwangsoo Lee's article, In Daegu, which was published serially from September 22 to 23 in 1916. The thesis aims to analyze important themes that were chosen in order to reproduce and evaluate the society in the article, In Daegu, and to examine the used knowledge (vocabulary) and expressed styles for developing it, thereby pointing out understanding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s regarding the meaning of publicity in the *Daily News* after the mid-1910s, and thereby introspecting its historical meaning.

Kwangsoo Lee analyzed the Daegu youngsters' holdup men case, which was a big issue at that time. His analysis excluded the two dominant aspects: morality and public order, which the *Daily News* used for reproducing and evaluating in Choson Society.



The analysis strategy of Kwangsoo Lee was the socialization and psychological strategy. He analyzed the psychological reason in the case and suggested a social solution. His new analysis changed the readers' attentions to the youngsters' status and their desires, and this made them focus on the the (Choson) society stance and desires. In conclusion, Kwangsoo Lee exposed the idea that the (Choson people) society's common pursued value and desires were not social security but solidarity, activity, and autonomy. The rhetoric aim of In Deagu was identifying society and defining social publicity.

Kwangsoo Lee's discussion about society and social publicity in the *Daily News* demanded and formed an alternative discussion space against the two dominant discussion spaces, i.e., the discussion space of colony authorit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nd editors of the *Daily News*) and of the noble and Confusion educated classes. He recommended a group of religionists, educationists, and especially authors who were capable of and liable for establishing the society and social publicity, and could understand the modern era. Moreover, he suggested and practiced social criticism that the Choson people, for themselves, used to criticize social good and evil, and beauty and ugliness. Through this symbolic practice, he formed and produced the society (of the Choson people).

**Keyword** ● *society, social publicity, public order, the socialization strategy, psychological strategy. social criticism, autonomy, Daily News(Mae-Il Sin-Bo), In Daegu*

